

HPAI(H5N1) 방역대책 공청회 개최 제의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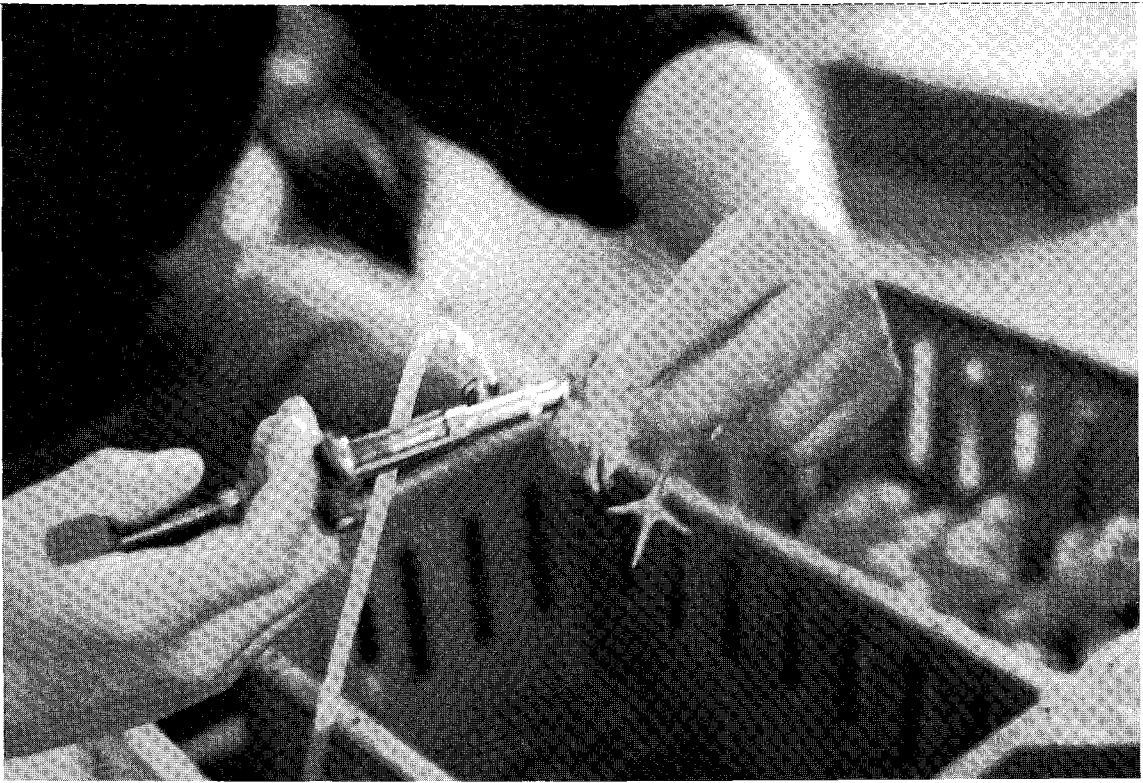
한 희 풍한농장 대표

지난해 12월 국내 첫 HPAI 발생 후, 방역당국의 발생지역 반경 3km내의 살처분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의 연구자료와 발생대처사례, 국제기구(FAO, OIE, WHO)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불행하게도 감염된 농장은 살처분 하더라도, 차단방역을 충실하게 실시한 미 감염농장만이라도 국가 관리하에 백신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농가피해와 매립으로 인한 인력동원, 환경오염, 막대한 국가재정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살처분과 백신병용(이하 백신 병용이라함)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이하 방대위라 함)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심지어 관련 학자들의 인격문제까지 거론한다면, 이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양계연구 4월호)하여 이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공청회 요청에 대해 기꺼이 응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공청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계농가와 양계협회가 주관하여 관련 교수들과 소득 없는 논쟁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 중차대한 국가대사에 반드시 정부관련 부처가 주관하여, 가능하면 입법부 관련 의원들까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백신병용주장농가와 살처분고수학자 및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향후 HPAI 재발시 반드시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어 필자가 관련신문 및 월간지를 통해 백신병용을 요구한 기고문에 대하여, 장문의 반론을 제기함으로(양계연구 4월호), 이에 대해 덧붙여 답변하고자 한다.



1. 「HPAI 백신접종에 그 시기와 종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테 대하여

- 인접국(중국 등)에 HPAI 발생이 수년 전이요, 그간 유럽 및 북미,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HPAI 발생에 대한 대처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2001년 중국산 수입오리고기에서 바이러스 검출 및 1996년 첫 발생이후 당국의 무대책으로 이미 전국에 토착화되어 해마다 국내양계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LPAI(H₉N₂), 그리고 작년 12월 HPAI(H₅N₁) 발생이후 여러 양계농가의 살처분 피해와 환경오염, 국가재정보상부담 등 국가적 재난이 지나갔고, 언제 또다시 재발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외국의 대처사례 및 연구자료에 대해 그 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우리는 아직도 신중히 검토만 하고 있어야 하나? 그러다가 그간 전국으로 확산되어 토착화된 LPAI처럼, 이 중차대한 HPAI도 전국으로 확산, 토착화되는 것이 아닐까 두렵다.

2. 「양계업계 일각에서 발생 초부터 백신접종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정부와 학계도 처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했으나, 국내 발생양상이 백신접종보다는 살처분이 효율적이라 유보했다.」는데 대하여

- 우선 백신만의 접종요구가 아니고, 우리 상황을 고려, 처음부터 살처분과 백신 병용을 요구해왔음을 강조하고 싶다. ①무차별 백신사용, ②무차별 살처분, ③살처분과 백신병용 이 세가지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HPAI 발생양상이 백신병용보다 살처분이 효율적이라 유보한 근거가 무엇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처음부터 살처분으로 일관한 방역당국에 대해, 우리 양계농가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양계협회를 통해 수차 요구한 끝에, 지난 1월 14일경 농림부에서 경남양산지역 HPAI발생시, 대책회의에 참여한 방대위 교수들과 검역원 관계자의 농림부 차관주재 발생대책 회의가 끝난 밤 6시경, 농림부에서 수시간 기다린 끝

에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막간을 이용하여, 잠시동안 필자에게 설명한 방대위 교수들이 주장한 살처분근거 (월간양계 2월호 p.103. HPAI백신 사용시 문제점 ① 불현성감염조류가 되어 통제불능, ②뉴캐슬질병처럼 토착화됨, ③백신의 불안전성, ④백신을 사용하면 당국은 손을 떼다. ⑤감염이 광범위할 때 고려할 사항, ⑥백신은 한번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사용, ⑦우리는 오리없이 백신을 사용한 외국과 다름, ⑧백신비용)는 HPAI에 대해 알고 있는 필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였다.

- 그러면서, 국내 AI연구기술은 세계최고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니, 위의 방대위 교수들의 살처분 주장 근거를, 그대로 국제학회에 발표하여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살처분 정책을 고수한다면 차후 재발, 또는 감염양상이 극심할 때, 국내 어느 양계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 방대한 국내 양계산업이 전면적으로 붕괴시, 국가에서 이 막대한 재정보상부담과 피해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3. 그리고 외국의 연구자료에 소개된 다음의 세 가지 (가, 나, 다) 사항을 열거하면서

가. HPAI는 언제든지 백신을 도입할 수 있고, 살처분과 병용시 상승효과까지 인정한다.

나. 현재까지 개발된 HPAI백신에 대한 야외 적용 효과도 인정한다.

다. (특히 방역당국에서 수년간 방치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양계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LPAI(H₅N₂)에 대한 백신의 필요성도 인정한다.」면서 또다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 4항 이하를 열거하며 그 반대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4. 「산란계나 종계에 대해서는 사독백신을 할 수 있지만 육계와 오리의 백신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발생 및

위험지역의 관리 가능한 양계장만이라도 국가의 철저한 관리 하에 백신을 사용하고 백신접종 후 실험실 검사나 감시계에 의한 감염이 확인시 살처분하지는 방법에 대해, 「그럴 바에는 그냥 (백신을 하지않고) 버려두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아니냐?」면서 「야외감염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이동제한이 풀릴 것이므로, 구태여 백신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한데 대하여

- 외국 AI발생지역에서도 오리, 칠면조, 육계, 산란계, 종계를 사육하고있으며, 산란계와 종계만 사육한 곳에서 백신을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 (Italy)

- 발생지역 산란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미감염계도 무차별 살처분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발생지역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오리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발동권도 행사할 수 없다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라고 생각되며,

- 또 설사 발생지역의 육계와 오리업자가 구태여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고 살처분을 원한다면, 살처분 백신 병용정책에서는 언제든지 현재 방식대로 살처분으로 보상할 수 있어, 백신비용으로 살처분 희망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원하는 관리 가능한 미감염 농장만이라도 백신으로 구제한다면 위 3항의 이유를 근거로하여 무차별 살처분보다는 환경오염, 인력동원, 및 국가보상부담을 줄이고, 억울한 미감염 농장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다고 본다.

- HPAI는 높은 폐사율과 인체감염위험 등 질병의 중대성 때문에 백신선택에 반드시 국가관리가 필요함은 어느 연구자로나 발생국 대처사례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중차대한 질병에 대해 발생지역에서 미감염계를 백신접종도 하지않고 이동제한이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불속에 폭탄을 던져두고 터지지 않는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물론 백신접종시에도 백신접종농가가 100% 방어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백신접종계는 감염시 임상증상이 약하게 진행되어 만에 하나 증상발견이나 검사

소홀로 인해 지나칠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감시계에 의한 대안도 외국사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J.H.Breytenbach, ND) 따라서 우리 방역당국이 감시계가 필요 없을 만큼 새로운 백신개발이나, 검사, 관찰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5. 「HPAI는 혈청학적으로 검사할 수 없어 접종능가의 닭이나 감시계 임상증상이 나오기 전에 검사함은 비현실적이며 백신접종능장을 대상으로 평소예 계속 바이러스를 검사함은 현재 수의검역원 조류질병과 역량을 볼 때,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데 대해

- HPAI 백신채택에서 감염항체와 백신접종항체의 감별진단 검사방법 때문에「동종 H항원 이종N항원사독백신」(이테리DIVA) 이나, 「유전자 재조합 백신」(멕시코)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vian Pathology 8. 2003. 32. 4, I. Capua & S. Marangon)

-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진단과 연구에 관련된 기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양계연구 4월 74P3항)면서 국제사회에서 이테리나 멕시코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극찬하고 있는 검사능력도 없단 말인가?

-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불현성 감염계의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특히 AI발생시 과밀사육지역에서는 AI가 확산되기 전, 발생초기단계에 사용하고, 종식되면 백신의 공급을 중단하는 정부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백신사용시 우리 수의검역원 검사역량으로 볼 때 현실성이 거의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전국토로 확산되어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백신접종계획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 HPAI 질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HPAI백신사용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전국

토로 확산>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외국연구자료에서도 HPAI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양계과밀 사육지역에서는 살처분만으로는 너무 경제적 희생이 크고, 차단방역에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백신병용을 권장하며, (I. Capua, S. Marangon) 백신사용시에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며, 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 발생초기에 사용하고, 종결되면 백신공급을 중단하여 AI의 토착화를 막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J.H. Breytenbach)

- 발생 및 위험지역에서 발생초기단계에 미감염계의 국지적인 백신사용도 수의검역원 역량이 모자라 백신 불가론을 주장하면서, 전국토로 확산되어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는 무슨 역량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인가? 만일 국가에서 백신관리를 못하겠다면 인체 감염우려가 있는 HPAI를 현재의 ND나 LPAI처럼 토착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묻고싶다.

7. 「위험지역내 농장에서 백신접종한 후 계란을 외부로 반출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인가? 임상발현 전 소량이라도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소비자는) 백신접종계란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는데 대하여

- 백신은 미감염계군에만 접종하는 것이지, 감염계군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다. 백신병용에서는 감염계군은 모두 살처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감염계군이 사독백신을 접종했다고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 감염계군이 임상발현 전에 소량이라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은, 백신 미접종계나 백신접종계나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은 있는 것이며, 오히려 발생지역에서는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바이러스배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따라서 확산위험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만에 하나 위험성에 대비

하여 백신접종계는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 까다롭기로 유명한 EU에서도 미감염계군의 백신 접종 양계산물은 그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World Poultry 02, 18-7)

- 더구나 홍콩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류의 수입서류에 백신을 접종한 사실과 일정수준의 항체확인증명이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는 협정까지 중국과 체결하고 있다. (03. 7. 18)

- 특히 AI는 기구, 사람, 조류이동이나 계분으로 전파위험이 크지, 계란을 통한 전파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D. A. Halvorson) 특히 미감염계군이 백신접종한 후 감염되었다손 치더라도 잠복기간 중 바이러스 배출가능성은, 백신미접종계군의 감염계가 잠복기간 바이러스 배출가능성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런 것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양계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백신불가론만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묻고 싶다.

8. 「외국 HPAI 발생사례에서 백신접종으로 완벽히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다. 95년부터의 멕시코, 99년부터의 이태리는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까지 거론했는데

- 살처분정책을 채택했다고 HPAI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와 2003년 양계산물 수출국인 네덜란드가 살처분정책으로 대처했다고, 한국과 네덜란드에 HPAI가 다시 재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 이태리와 멕시코도 살처분만으로는 도저히 AI를 근절할 수 없어, 재발시에 백신을 병용했는데, 백신병용 후 효과적인 대처에 대해 모든 연구자료와 국제기구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HPAI 대책에 국제기구(FAO, OIE, WHO)에서도 백신 병용을 권장하고 있다. (Rome, 5 Feb, 2004. FAO)

- 최근 미국 동식물 검역청에서도 AI긴급근절계획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장래 고병원성 AI통제전략을 세웠다 한다. (D.E. Swayne 외 4인)

- 중국의 사례를 거론했는데 국가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공산국가의 발생사례에 대해 국제기구에서도 잘 모르는데, 국내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 중국문제까지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 H7과 H5계열 AI는 동일계열 내에서는 수시로 그 병원성이 변하는데 약병원성에서만 백신을 사용자는 목적은 아니며, 약병원성 발생시 사용하여 강병원성 발병이 없었을 따름인 것으로 알고 있다. (World Poultry 02, 18-7)

- 특히 H5HPAI에서 「수 년간에 걸친 야외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에도 불구하고 백신으로 H5HPAI를 방어할 수 있다.」 (D.E. Swayne외 4인 Veterinary Microbiology 74(2000) 165-172)고 하였다.

9. 「검역원 조류질병과에 (바이러스를 다루는) 바이러스실 연구원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4명」이라며 「조직과 예산에 책임질 수 있는 정책 담당자는 1,2년이면 다 바뀌니 누가 강력하게 (인원확충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전국 축산관련 지방 수의대생도 거의 없다.」며 「일반 수의대는 HPAI를 다룰만한 사실이 없어 원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데 대해

-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나간 과거는 차치하고 그러면 이번 HPAI 발생시 방대위 교수들은 정책당국자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상황을 절실하게 설명했는가? 묻고 싶다.

- 수입개방에 대비 과거에도 수십조, 현 정부도 앞으로 백신수조를 농촌에 투자하겠다는데, 농정당국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수의검역원의 인원과 예산 확충을 외면한다면, 이런 천문학적 예산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말인가?

- 「현 예산과 인원으로는 도저히 전국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으며, 이것은 사단병력의 적군을 분대병력으로 싸우라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활용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농정당국은 전국 각 수의대에 원초적으로 바이러스를 다룰 장비나 검사능력을 지원할 능력이 없단말인가?

- 이런 상태에서 어느 수의대생이 연간 수백만원 등록금을 내고, 6년간을 허비하며 무엇을 배우겠다고 축산 관련 전공을 지원하겠나?

- 이런 실상을 고위층에 제대로 전달하고, 조언하는 것이 방대위 교수들 역할이 아닌가?

10. 「Swayne 박사가 국제 수역사무국 공식조사원으로 한국을 방문, 우리능력을 높이 평가, 백신이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또 국내에서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해 연구하는 조류질병학자들이 HPAI에 대한 세계적 현실도 모르고, 권위 의식에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살처분 정책으로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예를 들었다.»는데 대해

- 정책당국은 HPAI에서도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 해야 되며, 특히 농림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입장에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이웃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HPAI 발생에 대해 가금산업이야 붕괴되든말든 경제적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살처분 근절정책을 택한다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는 얼마나 좋겠는가? 중국이 한국보다 어리석어 백신을 사용하면서 국제적으로 은폐의 의혹까지 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남아국가와 달리 발생초기에 신속히 대응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는 것은 수궁이 가지만, 살처분(국내발생 19개 농가, 살처분 392개 농가, 528만수 살처분, 1500여억원 상당피해)만으로 HPAI에 대응한 전략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

는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 엄격한 차단방역을 강조하며 반경 3km 내 무차별 살처분을 강행한 당국이, 발생 인근지역 미발생 양계 농가 주변에서 방사되어, 야외에 뛰어다니는 가정사육 조류에 대해 양계농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대처해줄 것을 요구해도 개인재산권 침해라며 외면하는 당국이, 우리나라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 십년을 밤잠 설치며 일궈놓은 농장을 인접지역 반경 3km 내에 HPAI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단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미감염 농장을 하루 아침에 살처분으로 농장이 폐쇄당하는데, 이것이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것이 아니라고? 보상금 몇푼으로 살처분 폐쇄농가가 폐쇄 전처럼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제외한 어느 산업분야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량기업에 대해 열악한 기업과 동일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경제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정책당국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감염 양계 농가의 연좌적 피해는 막아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우리는 그간 방역당국의 티브스의 백신도 입지연으로 국내 양계농가는 물론 국민보건의생애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으며, 또 LPAI 발생이 수년이 지나도록 백신사용을 금지하여, 해마다 피해를 당하는 전국의 양계농가의 확산피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 또 학계 일각에서 혈청형이 다양하여 변이가 쉽다느니, 사독백신 접종시 감별이 곤란하여 보균계로 남을 염려가 있어, 새로운 진단법 개발,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신개념의 백신개발등을 이유로 살처분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AI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새 기법이 개발될 때까지 발생안하고 기다리고 있겠는가? 우리는 우선 백신은행만이라도 신속히 도입하여 현재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진단법과 백신으로 우선 차후 재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면 보완하는 것이 우리 양계업계를 살리고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안기**